

휠체어 참배 어려운 국립5·18묘지

경사 가파르고 묘역 내부는 흙길...장애인·노인 등 접근 불편 어린이들 "유령봉안소 어둡고 무서워"... 시설 개선 서둘러야

#1. 지난 20일 방문한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소속 장애인 60여 명이 휠체어를 타거나 불편한 몸을 이끌고 힘겹게 묘역을 오르고 있었다. 장애인들은 전통휠체어를 탓음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경사 탓에 금방이라도 뒤로 넘어질 듯 불안해 보였다. 함께 나선 사회 복지사 10여 명은 분주히 장애인 사이를 오가며, 부축하고 휠체어를 잡아주느라 진땀을 뺐다.

장애인들은 추모탑에 헌화한 뒤, 참배를 위해 묘역으로 올라가려 했으나, 급한 경사 탓에 결국 참배를 포기해야만 했다.

전통휠체어를 타고온 한 장애인은 "장애인 혼자서 이동할 수 없는 구간들이 너무 많다. 5·18민주운동 희생자 분들의 묘역을 참배하고 싶었으나 경사가 심하고 묘역 내부는 흙길이라 휠체어를 타고는 도저히 갈 수 없어 포기했다"며 아쉬워했다.

#2. 같은 시간 묘지 내 유령봉안소를 찾은 어린이 참배객 중 일부는 울상을 지으며 봉안소를 빠져나오고 있었다.

묘역에 안장된 5·18열사의 영정을 모신 유령봉안소는 고인돌 형태 외관에 비교적 어두운 내부 조명으로 인해 어린이 사이에서는 무섭다는 인식이 퍼진 곳이다. 이날 유령봉안소를 찾은 한 초등학생은 "너무 어둡고, 무서웠다.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치원생과 초등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5월이면 5·

18묘지 참배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무서웠다는 말을 많이 한다"면서 "5·18에 대한 기억이 어둡고 무섭다는 식으로 자리잡을까 걱정이다. 어린이 맞춤형 참배 프로그램이 필요할 듯 하다"고 조언했다.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쉽게 참배할 수 있도록 국립5·18민주묘지의 시설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규모 참배객이 예상되는 내년 5·18민주운동 40주년을 앞두고 묘역 접근·편의성을 높이고, 엄숙하되 무섭지 않는 추모 공간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21일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 지역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국립5·18민주묘지는 조성(1997년 완공)된 지 20년 이상이 지나면서 바닥 곳곳이 꺼지거나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또 묘역으로 통하는 일부 통로는 급경사로 인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 참배객은 보호자의 도움 없이 이동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다.

구묘역으로 통하는 국립5·18민주묘지 후문의 경우에는 그나마 계단과 함께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경사로 시설이 갖춰져 있긴 했지만, 경사가 급해 장애가 없는 성인도 난간을 잡지 않고는 오르내리기 힘들 정도였다.

참배객 김신국(53·광주시 광산구)씨는 "이제 미끄러질뿐이지, 경사로인지 모르겠



국립5·18민주묘지 제1묘역 진입로에 설치된 경계석. 경사도가 큰 경계석 때문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혼자서 묘역 참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며 "50대인 나도 불편한데 다른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사고로 이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4.8도)을 넘어서는 안되도록 규정돼 있다.

국립5·18민주묘지측은 "경사로 부분에 대한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는 있지만,

주변 도로가 광주시 소유이다 보니 쉽사리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5월 단체 관계자는 "국립5·18민주묘지의 시설을 보면 국립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낙후한 시설이 눈에 띈다"면서 "5·18 40주년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의 낙후한 시설을 하루빨리 개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광주 산업현장 안전사고 사상자 잇따라

광주지역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에 따른 사상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21일 광주 소방소방과 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정오께 광산구 등입동한 창고 입구에서 A(50)씨가 1t 트럭 적재함과 지게차 전면부 사이에 끼여 숨져있는 것을 사고현장 근처에서 농사를 짓던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목수업을 하는 A씨는 오전에 페인트칠을 마치고 점심때 혼자 화물차에 목공예품을 실으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같은날 오후 1시께에는 광산구 옥동 평동산업단지 내한 공장에서 B(25)씨가 작업 중 금속판을 굽히는 기계에 손을 다쳤다. B씨는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구례경찰 '100억대 사기 대출' 11명 적발

1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건어물 유통업자와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구례경찰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에게 대출을 위한 명의를 빌려준 지인 6명도 특정범죄 사기 혐의로, 부정대출에 연루된 금융기관 관계자 4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건어물 도·소매 유통업을 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구례의 한 금융기관에서 담보 물건을 과다 평가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수법으로 총 119억원을 부정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6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은 건어물 재고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임원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콘도개발 비리 의혹 고홍군청 압수 수색

경찰이 콘도 개발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고홍군청과 박병중 전 군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21일 고홍군청과 고홍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20여명은 이날 고홍군 기획실과 재무과, 건설과 등 3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박병중 전 군수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찰은 박 전 군수 재임 시절 콘도개발을 하면서 토지보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싼값에 건설사에 부지를 제공한 의혹을 포착하고, 업무상 배임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고홍 주민 1000명은 지난 2월 박 전 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긴급조치 9호 위반 70대 42년 만에 재심서 무죄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70대가 42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태호)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70)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반돼 무효·무효라며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1976년 3월 18일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들에게 유선 체제 아래 문교정책과 사업부의 재판에 대해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두환 광주행 증언' 김용장씨 참고인 조사

5·18 민주화운동 기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방문을 주장한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1일 광주지검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김씨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과 관련해 지난 17일과 20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1980년 당시 제1전투비행단에 주둔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 광주 비견대에서 근무한 유일한 한국인 정보요원이었다. 그는 1980년 5월 21일 보안사령관이었던 전씨가 광주에 내려와 회의를 주재했다는 정보를 상부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 같은 날 낮 계엄군이 광주에서 수송용 M-60 기관총을 쏘고 5월 27일에도 광주전 인근에서 위협 사격을 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날 검찰에

자신이 501정보여단에서 20년간 근무하고 받은 서류 사본 등을 제출했다.

김씨의 진술은 5·18 유혈 진압 책임자 규명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전씨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을 검토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지를 결정한다.

검찰은 김씨 외에도 KBS와의 인터뷰에서 31항공단에서 탄약 관리 하사로 복무하며 1980년 5월 22일 광주로 출격하는 헬기에 탄약 2000발을 지급한 뒤 복귀한 헬기에 탄약 500발이 비어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최중호씨 등 헬기 사격과 관련한 추가 증언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월단체 "전두환, 사살명령 자백하라"

전씨 집 앞에서 희생자 시신 처리 방법 등 규명 촉구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모여 "전두환은 5·18 당시 내린 사살 명령을 자백하라"고 규탄했다.

"5·18 역사왜곡처벌농성단"은 국회 앞 농성 100일을 맞아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21일)은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사살로 최소 54명이 사망한 날로부터 39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전두환은 5·18 항쟁 중 사살 명령을 내렸다. 반인륜적인 양민 학살의 주범이 자신이었음을 자백하고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18을 무력 진압한 이후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시신을 옮긴 기록이 있다"며 "계엄군이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상세히 자백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5·18 기간 동안 북한군이 잠입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했지만, 시민들은 성숙한 민주 의식을 보여줬다"면서 "광주에 침투했다는 '북한 특수군'이 사실은 남한 특수부대였음을 자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씨는 7년간 대통령을 지내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형제와 측근이 부자가 됐다"며 "엄청나게 불어난 부정한 부를 날같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배 농성단 대표는 "오늘 전두환에게 최후통첩한다"며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날같이 고백하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씨의 자백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집대문 밑으로 밀어 넣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질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 씨엠테크복합방수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필 제 190402-중-91648호]

진정한 난임의 극복은 임신의 소식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출산입니다.

난임치료 | 시험관아기시술 | 남성난임 | 난자냉동 | 복강경수술

정효영 원장

의료진 | 최범채 김영미 정효영 오인경 최민영

062)368-1700

광천동 LG유플러스 옆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